

- 교권회복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4인)	3
③ 자유토론(참여자 전체)	7
④ 청중토론	8
⑤ 마무리말씀	9
III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10
IV .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향)	10

- 교권회복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민·교사·학부모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안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요구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3. 12. 12.(화), 14:00~16:30 / 충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참 석 : 30여명(교사,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교권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 ※ 신청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충남도민과 교사,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회복”과 관련하여 충남의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학생-교원-학부모, 이 교육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최근 서이초 교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문제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든 참석자가 공감하였으며,
-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데 반해 교권을 보호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늦어졌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함에 모두가 공감함.
 - 앞으로,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개정된 상위 법률에 맞게 충남교육청 조례개정 뿐만아니라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교권침해는 범망을 교묘하게 비껴간 이상한 학생, 이상한 학부모, 이상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침범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교사의 권위와 교육활동의 전문성강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문화의 정착과 교육공동체 3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행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함.
 - 이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이 필

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강화와 아동학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함.

- 이제는 교권보호 4법이 아니고, 교권보호 5법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연수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교원들의 사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충남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할 것임.

[2] 지정토론(4인)

① 이남훈 (천안구성초등학교 교장)

- 사회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그 불만을 교육현장에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학부모는 IMF 당시 학생이었던 분들로 7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반에 출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IMF와 코로나 펜데믹을 모두 겪어 삶이 녹록지 않은 세대임.
- 법률적으로 보면 1995년 5월 31일 교육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음. 2020년에는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었고, 2020년대 부터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
- 이렇게 교육 공동체의 권리가 신장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 권리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음.
- 2016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육활동 보호,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문화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이때 지정하면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 교권보호 정책으로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확대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행·재정적 지원과 인력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민원처리, 사전 학교방문 예약제 등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학급단 학생 수를 줄여서 담임선생님이 담당해야 될 학생수를 줄여야 함.
- 과거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된 것 같음. 어찌보면 서글픈 현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이 교권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며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램.

② 최선희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

- 전제상 교수님께서 학교의 법화(法化)로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교권과 학습권간의 불균형 초래’ 되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함
- 하지만 불균형이 곧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함.
-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이 여전하기 때문임.

- 보호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교사 본인은 아동학대와 민원을 걱정하며 아이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잔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음.
- 교사의 전문적 권위의 사회적 기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강화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우선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의 정착이 있어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하리라 믿고 있음.

③ 박병일 (충남학부모회연합회 회장)

-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우리 충남학부모회연합회에서도 애도를 표하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임.
- 교권침해 사안은 대부분 극히 일부의 나쁜 학생, 나쁜 학부모, 나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마치 전체가 다 그러한 냥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본인도 12년째 학교 운영위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라 여기시면 될 것임.
- 아이들 교육에 있어 국어, 영어, 수학 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되면 교권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충남 학부모회는 어느 17개 시도보다 발빠르게 교권 보호에 앞장 서 왔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부모회가 하나가 돼서 가교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임.

④ 심상주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교권보호팀장)

- 최근 3년간 충남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 무엇보다 모욕, 명예 훼손 부분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4년간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총 72건인데, 그중 진행중인 것이 26건, 종결된 것이 46건으로 종결된 사안 중 43건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약 6천건이 넘는데, 그 중 유죄 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9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5%에 해당한다고 함. 그 이야기는 98.5%가 실제로 아동학대 건수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선생님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말로 해석됨.
-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교권침해 예방 방안 마련, 둘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의 법률적인 보호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강화, 마지막으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

호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선생님들은 아직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5호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살아 있는 한 여전히 교사들은 똑같은 신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이에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 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충남의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강화, 피해교원 보호조치 강화,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시 대응 방안 강화,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민원 응대 시스템 및 학교출입 관리 강화, 교권4법 개정 주요 내용 현장적용 방안 강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교육청은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고 있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3] 자유토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항 정서적학대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제상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함

[질문 : 심상주 충남교육청 팀장]

- 교육법규와 아동법규간의 상호 법률이 생긴 배경이 다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면 교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그 권리가 더욱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시발점으로 천천히 진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답변 :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4 청중토론

- spo가 학교 내 경찰관이 도입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게 되면 교육의 영역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의 경우 spo 정책으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부에 따른 차별, 혐오 문화가 더 많아진다는데 이에 대한 전제상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 : 심성훈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 / 천안오성고 수학 교사]

- 현재 학폭이라든가 악성 민원, 그리고 학교 무단 침입 이런 부분에 대한 단위 학교가 그걸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함. spo 정책으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구성원들이 교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지원 인력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답변 :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과실이 적은 경우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질의 : 이은주 충남교총 사무총장]

- 올해 7월 이후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하고 있음. 또한 선생님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변호사 대행서비스는 사전에 일체의 관계 서류를 변호사에게 미리 다 전달하고 진행하는 관계로 걱정 안해도 되고, 소송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를 하여 지원해 줄 것인데, 단 무죄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면 일괄적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음. [답변 : 심상주 충남교육청 팀장]

5 마무리 말씀

- 우리나라가 발전한 바탕이 교육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당면 과제 중에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함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교원들의 최근에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87.5%가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응답함
-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들의 올바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함.
-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학부모 모두가 신뢰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굳건하게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

[마무리발언 :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함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중요함.
-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
- 교권보호와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함.

<결 과>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함.
-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함.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인사말씀(방한일 의원)



축사(김응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축사(김종하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축사(이인원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행사진행(토론)



참석자 기념촬영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95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86건	
1	시사터치	방한일, 교권 회복방안 모색 의정토론	'23.12.12
2	충청뉴스라인	방한일 의원 "상처입고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 없도록 해야"	"
3	파워뉴스	방한일 의원 "상처입고 교직 떠나는 교사 없도록 교육공동체 함께 노력해야"	"
4	세종방송	방한일 충남도의원 "상처입고 교직 떠나는 선생님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
5	CTN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
6	금강일보	"교권 침해 처분 절차적 시스템 필요"	"
7	뉴스세상	충남도의회, 교권·학습권 공존 대책 논의	"
8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교권·학습권 공존 대책 논의	"
9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대책 논의	"
10	충청타임즈	교권 회복·학습권 공존 방안 머리 맞댔다	"
11	아시아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 회복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12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3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14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5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6	중앙매일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7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8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19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0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1	로컬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2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3	전북제일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4	서산시대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23.12.12
25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6	C뉴스041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7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8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29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0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1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2	뉴스프리존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33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4	충남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5	중부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6	서울매일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7	더시그널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8	신한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39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0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1	BreakNews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42	전국지방자치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3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4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5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6	충남인터넷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7	시사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8	로컬경기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49	정필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0	경인굿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1	경기인터넷신문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2	미디어이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23.12.12
53	내외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4	미디어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5	뉴스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6	뉴스채인지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7	드림자원센터미디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8	NWS내외방송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59	코리아닷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0	시사뉴스24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1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2	국제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3	명성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4	검경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5	프레스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6	골든타임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7	문화매일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8	KSPnews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69	중앙뉴스미디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0	sbn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1	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2	뉴스투나잇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3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4	미디어타임즈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5	엔디엔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6	농수축산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77	금강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8	매일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79	쿠키뉴스	충남도의회, 교권확립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23.12.12
80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81	경인투데이뉴스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82	데일리연합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
83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84	충남일보	'교권 회복 방안 모색' 의정 토론회...교원, 학부모 상호 존중해야	〃
85	충청투데이	'바람 앞 등불' 충남학생인권조례... "교권학생인권 상충 개념 아냐"	〃
86	대전일보	"학생인권조례" 존폐 기로선 가운데 학생인권교권 각계 의견 표출	〃
지면보도		9건	

87	충청신문	'교권회복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23.12.13 종합02면
88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교권·학습권 공존 대책 논의	'23.12.13 종합02면
89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교권회복 방안모색 의정토론회	'23.12.13 전국09면
90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교권·학습권 공존 방안 모색	'23.12.13 지역11면
91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23.12.13 종합03면
92	충청타임즈	교권 회복·학습권 공존 방안 머리 맞댔다	'23.12.13 지역15면
93	중앙매일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23.12.13 종합14면
94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서 교권회복방안 모색	'23.12.13 사회06면
95	충청투데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앞두고 '교권회복 모색' 의정토론회 열어	'23.12.13 정치05면

□ 지면보도

투데이충남

2023년 12월 13일
02면 (종합)

충남도의회, 교권 · 학습권 공존 대책 논의

학생수 축소·교권침해 시스템 구축 등 제안
방한일 의원, 교직떠나는 교사 없도록 해야

충남도의회가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 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교수는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교직 특성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과 갈등

△교권보호 4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훈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권 보호는 더디다”며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교권침해 처벌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 필요성을 주장했다.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권회복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기념촬영

충남도의회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

상주 팀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촉발

된 교권 인식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우리의 교원들이 상처 입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양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이예슬 기자

(28.3*14.6)cm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박보성 기자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학생수 축소·교권침해 시스템 구축 등 제안
방한일 의원 "상처입고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 없도록 교육공동체 함께 노력해야"



▲ 교권회복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교수는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주제로 △교직 특성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과 갈등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훈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교권침해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 필요 등을 주장했다.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팀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촉발된 교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우리의 선생님, 교원들이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양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